

## [決議文] 今こそ潔く大統領は退陣せよ！

あまりにもひどすぎる。

血のにじむ思いで解放され再建に至ったわが祖国、韓国がただの一日であっけなく崩れ落ちる姿を前に悲しみに胸のつぶれる思いを禁じ得ない。この破壊の主演とはほかでもなく大韓民国の大統領であることに、我々は恥辱の極みであり、ただ苦痛にもだえるばかりである。

去る3月16日、日本の東京において開催された韓日首脳会談とは一言で歴史的惨事である。歴史の正義、経済、軍事安保、被害者の人権などすべてを売り飛ばした「大型たたき売り」式の朝貢外交によって国民に深い痛手と恥辱が負わされることとなった。

尹錫悦大統領は、日本帝国主義の残酷な強制動員によって苦痛を受けた被害者たちが30年余りにわたり法廷で闘い勝ち取ってきた韓国大法院の判決を全否定してしまった。「かつての韓半島出身労働者問題」とみなし、事実上強制動員を否定した岸田総理の妄言をまるで何でもないことのように聞き流しながら、尹大統領は立っていた。挙句の果てに、「大法院判決が政府の立場と異なる」と言いつつ、大韓民国の司法主権をことごとくひっくり返してしまった。日本企業に対する賠償請求権が存在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無責任にも投げ捨ててしまったのだ。被害者たちが心から願っていた加害者の謝罪も必要ないと宣言した。どこの誰があなたにそんな権限を与えたのか。

日本の不当な通商攻撃に対する正当な対応措置であるWTOへの提訴とGSOMIA終了通告の効力停止も虚しく破棄してしまった。そのように皆投げ出してもまだ足りぬかのごとく、福島汚染水海洋放流に賛意表明まで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自衛隊の観閲式に臨みながら、侵略の象徴である日章旗に頭をたれ、「平和憲法」を無力化させながら、「敵基地攻撃能力」保有を宣言した日本の安保三文書改定を「理解する」と言い放った。安倍が創案したインド太平洋戦略の下部構造にはめ込まれ、自衛隊と軍事協力まで約束した。挙句の果てに、「2015年慰安婦合意」履行の要求と「独島<竹島>問題解決」という日本政府の新たな宿題を抱え込んできた。反省なき戦犯国家の軍国主義的野望に足がかりを与え、韓半島の平和を一層危うくし、国際法上保障された被害者の権利を黙殺し、東アジアの市民すべてのいのちを危機に陥れる権限を、誰があなたに握らせたというのか。

しかも尹錫悦大統領は日本が帝国の道へと進んだ1895年に創業されたとんかつ屋で飲食し談笑したのだ。しかも帝国主義侵略の土台を築いた民族差別主義者が設立した大学にて演説をした。その席で「朝鮮」を蔑視し、植民地支配に積極的であった人物の言葉を引用した。

あまりにも驚き呆れ果てるこの歴史認識に返す言葉も失う。尹錫悦大統領が何度も繰り返して強調した「国民のための決断」の「国民」とは誰のことか、「新しい時代」とは果たして誰のためのことを意味しているのか、これで歴然としたのである。

一つひとつ列挙するにきりがなく、心痛まずにおれない状況が展開される中、日本の傲慢は天を穿つほどである。植民地支配、謝罪、反省という言葉は日本の総理の口から結局発せられることはなく、予定にもなかった会見において第1野党代表は「少女像」にまで批判的言及をしたという。「虚構的未来観」によって若者たちを欺くために急ごしらえされた「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に日本最大の経済団体である経団連が拠出するといったのがわずか10億円に過ぎなかった。「あまりに多くの商い」に日本政府さえ当惑せずにおれないはずだ。願わくはこれ以上追及するなといわんばかりに日本の言論も後押し的な論調に終始している。

この空虚な事態をどのように形容できよ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外交惨事、無能外交、屈辱外交、屈従外交、亡国外交・・・これはもはやどの言葉でも言い尽くしがたい「異次元」の歴史的惨事である。韓半島の不合法的強制占領、強制動員と日本軍性奴隷制の事実を否定し、謝罪も賠償も拒否し、領土主権さえも脅威にさらす日本政府の前で額ずき、すべてを明け渡し尹錫悦大統領はすでに大韓民国大統領の地位を放棄しているではないか！

これは「3・1独立運動によって打ち立てられた大韓民国臨時政府の国家構想」を継承した大韓民国大統領の姿でありうるはずがない。これは「国家の独立・領土の保全・国家の体制の維持と憲法保持の責務」に尽くすべき大韓民国大統領の姿であろうはずがない。大韓民国の国益と主権、そして国民を丸投げし、憲法に背反し、民主主義を根こそぎ毀損することが大韓民国大統領の姿であっては決してならないはずだ。

我々は要求する。尹錫悦大統領は大韓民国の大統領をこれ以上続ける資格はない。今こそ相応しからざる職から退くべきだ。

「亡くなられた被害者がたに後ろめたさを残さない結果を願う」と言われたイ・チュンシク・ハラボジ、「物乞いのようなお金は受け取らない」と言うヤン・グムドク・ハルモニ、「日本は謝罪せよ」と言われるキム・ソンジュ・ハルモニの言葉を記憶し継承しようとする我々は歴史正義を心に刻み、被害者の人権と名誉回復のために最後まで闘うことを心に誓う。志を同じくする全世界の市民と連帯し、東北アジア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守り抜くべきである。

2023年3月18日

韓日首腦會談糾彈！ 尹錫悅政府の亡国外交審判！ 強制動員屈辱結着破棄！ 日本の謝罪と賠償要求！

第3回汎國民大會 參加者一同

[결의문]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무도 참담하다.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앞에 역장이 무너진다. 파괴의 주역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다.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그랜드 퍼주기’식 조공외교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잔혹한 강제동원으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 쟁취한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정한 기시다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대놓고 부정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쥐어 주었는가.

일본의 부당한 통상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인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도 허망하게 폐기했다. 그렇게 다 퍼주고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주었다.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군국주의적 야욕에 디딤돌을 놓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목살하며,

동아시아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쥐어 주었는가.

그리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제국의 길로 들어섰던 1895년 설립된 돈카츠 집에서 먹고 마시며 웃었다. 제국주의 침략의 토대를 놓았던 인종차별주의자가 설립한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조선’을 멸시하고 식민지배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의 말을 인용했다. 너무도 처참한 역사인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에 ‘국민’은 누구인지, ‘새로운 시대’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로써 명백해졌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의 오만함을 하늘을 찌를 듯했다.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 1 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다.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이 가공할 사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외교참사, 무능외교, 굴욕외교, 굴종외교, 망국외교...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 참사의 ‘신기원’이다.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며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쥐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것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이것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익과 주권, 국민을 내팽개치고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돌아가신 피해자들에게 몇몇한 결과를 바란다”는 이춘식 할아버지, “동냥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 “일본은 사죄하라”는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역사정의를 되찾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동북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23년 3월 18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